



2016년 보건복지정책 방향

김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지난 2015년은 담뱃값 인상,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확산, 『웰다잉(Well-Dying)법』 제정 가시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수립,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정 시도, 영·유아 보육·교육 종사자 및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고 정책적 환경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2016년은 이러한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착수·시행되는 해로,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이 122.9조원으로 정부 총예산(386.7조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8일 『웰다잉(Well-

Dying)법』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역시 올해부터 BRIDGE Plan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2006년부터 실시된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목표로 하였으나,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과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세부정책들이 올해에 개선·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각 분야별로 2016년의 관련 정책의 변화와 전망을 제시하도록 한다.

2016년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정책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

으로 보인다. 지난 10년의 저출산 대책은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국가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가정양립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기반 마련, 고령친화적·사전예방적 건강보장시스템 구축,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의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의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인인구의 질적 및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균형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평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였다. 특히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구조적 접근을 강화하고, 미래 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 등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비적정 의료의 문제 및 규모 파악, 적정 진료 및 처방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근거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지출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수는 2012~2013년에 모두 14회를 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 평균 재원일

수는 OECD 평균인 7.3일의 2배가 넘는 16.5일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항생제 사용량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단편적인 정책적 개입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2016년은 개인 또는 의료체계 관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한편, 올해에는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사태 이후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제도 강화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건강보험 제도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 안전법』이 시행되고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웰다잉(Well-Dying)법』이 제정되는 등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정비의 기회가 마련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2016년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 개편 및 보장성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차 의료 중심의 단계적 의료이용체계 구축, 환자 중심 의료 연계 및 조정 촉진, 의료의 질과 안전에 관한 의료기관 책임 확대를 지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도록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치 기반 통합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평가하기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로 전환됨에 따라 각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차등화, 일부 급여의 대상자 범위 확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 완화, 주거급여 책정방식 변화,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 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반영 등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6년에는 달라진 제도의 초기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 수행의 장애 요인과 한계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기초보장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였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올해에는 다음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들의 자격기준선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비하여 개편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육구영역별로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꾸준히 확대하여 이번 제도 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의 모색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서비스 운영·전달체계와 재원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었고, 2016년부터는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단위 서비스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읍면동의 역할이 단순한 공공부조의 신청·처리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욕구를 해결하는 맞춤형 통합서

비스 담당기관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추진된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등은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야를 점검하면, 가족정책에서 결혼 및 출산 등 가족형성과 가족기능 제고를 위해 가족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가정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사회문화환경 조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이 추진되는 해로 총 6대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 가며 가족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취약계층 및 위기아동 보호시스템의 부적절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온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분리·보호·재활에서 자립·인권·사회통합 지향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애판정제도 검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며, 『발달장

애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2016년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의 확충과 의료보장제도 발전에 따라 보건복지 관련 통계 확산과 정보기술의 전문성 강화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OECD 가입 후 매년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통계를 제출해야 하므로 아직까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통계에 대한 조사양식 변경, 기관협력, 분류에 대한 국제조류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단순 기초통계 생산에서 다양한 조사데이터 및 행정데이

터 등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IT 환경 및 사회환경 변화, 근거 중심의 실증연구 수요 증가로 통계자료의 연구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 3.0'과 더불어 최근 제시된 통계청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정부의 연구예산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관리, 제공, 활용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